

IV

협동조합연합회

1. 개요
2. 설립
3. 회원
4. 기관
5. 사업
6. 회계
7. 합병, 분할, 해산 및 청산
8. 등기

01

개요

정의

-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함(법 제2조제2호)

특징

구분	협동조합연합회 주요특징
법인격	(영리)법인
설립신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
수리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확인증 발급
기관	총회, 대의원총회(해당 시), 이사회
회원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일반)협동조합
출자한도	1개 회원 조합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40% 이내
의결권 · 선거권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 차등 부여 가능, 대리인이 행사 불가
임원	회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
사업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수행가능, 회원에 대한 지도 · 지원, 상담 · 교육훈련, 사업에 관한 조사 · 연구 사업은 필수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공제사업 가능
사업의 이용	공제사업을 제외하고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비회원도 사업이용 가능
회계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작성
경영공시	회원에 속한 조합원 수 200인 이상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 원 이상인 협동조합연합회는 경영공시 대상
법정적립금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잉여금의 10% 이상
배당	잉여금 배당 가능
감독	벌칙 및 과태료 부과가능

설립현황

- ‘19.12월말 기준 76개의 협동조합연합회가 신고수리되어 설립
- ※ 자세한 협동조합 설립현황은 www.coop.go.kr에서 확인 가능

02

설립

가 설립신고 절차

법 제71조(설립신고 등)

제71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협동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분	절 차	비 고
1	발기인 모집	3개 이상의 협동조합
2	정관 작성	발기인이 작성,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3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4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까지
5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의사록 작성
6	설립신고	발기인 → 기획재정부 장관
7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기획재정부장관 → 발기인
8	설립사무의 인계	발기인 → 회장
9	출자금 납입	회원 → 회장
10	설립등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11	사업자등록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1. 발기인 모집

- “발기인”이란 법인설립의 발기행위에 참여하여 설립업무 일체를 추진하는 자로서 정관에 기명날인한 자
- 회원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 작성(법 제71조제1항)
 - “회원자격을 가진 협동조합”이란 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협동조합
 -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 제한 가능(법 제73조제2항)

2. 정관 작성

- “정관”이란 협동조합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자치법규
- 법정서식은 없으나, 기본법 제16조(정관)제1항의 필수 기재사항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3. 설립동의자 모집

- “설립동의자”란 회원의 자격을 갖춘 조합으로서, 창립총회 전까지 발기인(협동조합)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협동조합을 의미(발기인 포함)

4. 창립총회 공고

-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창립총회 개최 전 7일 이상 공고
 - 일간지 게재, 벽보 게시, 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정관에 사이트 주소 명시해야 함) 등 회원 자격이 있는 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
 - 의사록 공증 및 설립등기 과정에서 공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공고 게시 사진 등 증빙자료 준비를 권장
 - 공고 당일과 총회 개최일은 공고기간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는 공고기간 7일 미만 등 창립총회 공고절차 또는 공고사항 등에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 반려
 - 공고기간이 7일 미만이라도 설립동의자 전원이 창립총회에 참석하고, 총회 소집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령 제6조의 취지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
- 창립총회 공고사항
 - 창립총회 일시 및 장소
 - 조합원의 자격요건
 -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5. 창립총회 개최

- 창립총회 필수 의결 사항
 - 정관
 - 사업계획 및 예산
 - 임원의 선출(임원은 회원 조합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
 -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주사무소 세부 소재지 확인 포함)
-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협동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창립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 작성

6. 설립신고

시행령 제7조(협동조합 등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제7조(협동조합 등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본다.

-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설립신고
 - 시행령 제7조제3항에서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설립신고를 접수한 담당자는 “협동조합 행정시스템”에 신고내용 등재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업무 지원(시행령 제32조제2항)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신청서류를 확인하고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협동조합 행정시스템」에 등록
 - * 「협동조합 행정시스템」에 검토보고서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결과가 통보됨(별도 공문시행 불필요)

7. 신고확인증 발급

법 제71조(설립신고 등) 및 시행령 제8조(설립신고확인증의 발급)

제71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 ④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협동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8조(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② 시·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법 제15조에 따른 설립신고에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설립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1.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제2항 전단에 따른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이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설립신고확인증(시행규칙 제8호 서식)’ 발급
 - 기획재정부장관은 설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봄

- 처리기간의 계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시행령 제20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②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①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2. 접수·경유·협의 및 처리하는 기관이 각각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 문서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3.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4. 당해처분과 관련하여 의견청취가 실시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5. 실험·검사·감정, 전문적인 기술검토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6.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선행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아래의 사항은 민원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함
 - 설립인가증 발급 처리기간에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되지 않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보완요구

- 설립신고 기재사항의 누락, 첨부서류 미제출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

- 보완된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후 14일 이내에 신고확인증 발급

•설립신고의 반려가 가능한 사항(시행령 제8조)

-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8. 설립사무의 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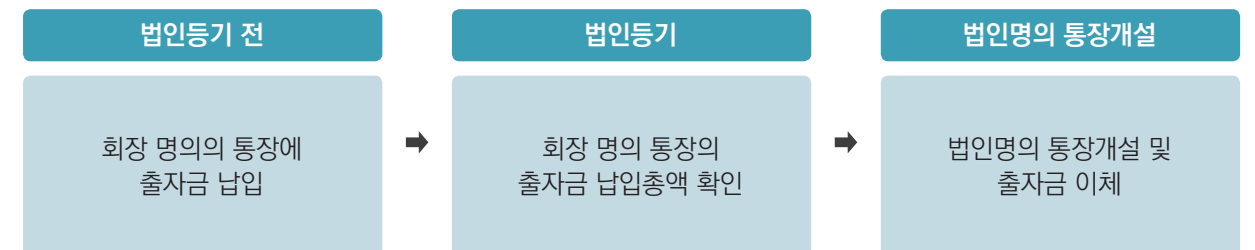
- 발기인은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회장에게 인계(법 제18조제1항 준용)

9. 출자금 납입

- 회장이 발기인으로부터 설립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회원이 되려는 협동조합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함(법 제18조 제2항 준용)

- 회장 명의의 계좌로 출자금을 납입하며, 등기 시에는 출자금 납입영수증 또는 은행에서 발급한 잔고증명서 제출(설립신고서상 출자금 납입총액과 통장잔고가 일치하여야 함)

- 현물출자자는 납입기일 내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연합회에 제출



10. 설립등기

법 제61조(설립등기) 준용

- 제61조(설립등기)** ①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하며, 연합회는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 “출자금의 납입”이란 출자자명부에 기재된 출자금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는 것을 의미
 - 등기를 게을리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119조제3항제1호)

11. 사업자등록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신청하며, 사업개시 전 등록신청 가능(부가가치세법 제8조)
 - “사업개시일”이란 제조업의 경우 제조를 개시하는 날, 기타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등을 의미
 - 등록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이 원칙이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일주일 정도 소요
 - 연합회 사업에 필요한 전용 사무실 확보
 - 주거하는 주택을 주된 사무소로 할 수는 있으나, 사업자등록시 주된 사무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을 위한 전용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권유
- ※ 제조업, 인쇄업 등의 경우 전용 공간이 있어야 사업자등록 가능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설립신고확인증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정관 사본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5	출자자명세서	
6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해당 법인에 한함. 허가(등록·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
7	자금출자 명세서	
	현물출자명세서	현물출자법인에 한함
9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내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사업자 등록 신청 요함

참고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〇〇〇 협동조합연합회(가칭) 설립발기인회」에서 추진하는 〇〇〇협동조합연합회(가칭) 설립과 관련하여, 법인 설립 및 운영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내지 제22조에 의거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제공 및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번호 포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목적

- 설립신고 등 설립업무 진행
- 출자금 확인 및 관리를 위한 개인 식별
- 설립동의자 명부 및 회원 명부 작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회원 탈퇴시 파기하며, 출자금 반환 등의 사유로 내부규정에 의해 최대 2년간 보존할 수 있음
 - 단, 주민등록번호는 설립신고 등 설립업무가 완료되면 즉시 파기
- *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및 제24조의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수집한 정보는 설립신고, 법인등기,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등의 사유로 필요시 아래의 기관에 제공될 수 있음

가. 정보제공 기관

- 설립신고 관련 : 기획재정부, 주사무소 관할 시·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법인등기 관련 : 주사무소 관할 등기소
- 사업자등록 관련 :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

나. 정보제공 범위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번호 포함)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각 기관별 내부규정에 따름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제공,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합회의 설립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〇〇〇 협동조합연합회(가칭) 설립발기인 대표 귀하

나 설립신고 서류

시행규칙 제5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 제5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① 영 제7조제1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② 영 제7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
 5.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발기인 및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제71조제4항에 따라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협동조합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명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법 제56조제1항·제2항 및 제83조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사본

구분	설립신고 서류	비 고
1	설립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2	정관 사본	법정 서식 없음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법정 서식 없음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법정 서식 없음
5	임원명부(임원약력 포함)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6	사업계획서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7	수입·지출예산서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8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법정 서식 없음
9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10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법정 서식 없음

1. 설립신고서

-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제출
 - ‘설립신고인’란에는 설립신고를 하는 연합회 회장이 속한 협동조합 명칭 및 법인등록번호 기재
 - ‘신고내용’란의 ‘설립동의자 수’에는 회원의 개수 기재
 - ‘신고인’란에는 신고하는 연합회 회장이 속한 협동조합의 법인 인감도장 날인

2. 정관

법 제16조(정관) 준용

제16조(정관) ①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8.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14.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총회·이사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③ 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정관”이란 협동조합연합회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자치법규
- 서식
 - 법정서식은 없으며, 사본 제출
 - ‘협동조합연합회 정관예시’를 참고하되, 협동조합연합회 고유의 특징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작성
 - 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은 반드시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나, 그 외의 사항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 연합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모두 정관에 규정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한 경우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음(법 제17조 준용)
- 주요 확인사항
 -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및 정관의 내용이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
 - 연합회의 명칭 등 정관의 내용이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
 - 출자 1좌의 금액을 균일하게 정하여야 함
 - 법 제80조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의 범위에 “금융 및 보험업”이 포함되지 않아야 함
 - 사업내용이 연합회의 설립목적, 명칭, 회원 구성 등과 관계없이 너무 많은 사업을 열거하지 않아야 함
 - 3개 이상의 발기인 협동조합이 정관에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함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시행령 제6조(협동조합 등의 설립 절차)

제6조(협동조합 등의 설립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일시와 장소
2. 조합원의 자격요건
3.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⑤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본다.

- 서식
 - 법정 서식은 없음
 -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회원의 자격요건, 창립총회에서 의결 하여야 할 사항 포함
- 주요 확인사항
 - 필수 포함 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창립총회 개최 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공고 당일과 총회 개최일은 공고기간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
 - 공고문을 게재한 신문, 게시사진 등 공고를 입증하는 자료를 통해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했는지 확인

4. 창립총회 의사록

시행령 제6조(협동조합 등의 설립 절차)

제6조(협동조합 등의 설립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과 예산
3. 임원의 선출
4.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③ 창립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창립총회 개의(開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가운데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기명날인(記名捺印)하거나 서명해야 한다.

- 서식
 - 법정서식은 없으며, 사본 제출
 - 핵심 내용에 대한 개조식 서술도 가능

- 총회개최 일시 및 장소, 참석자, 안건, 의장 및 기명날인자 선출과정, 필수결의사항, 기명날인 또는 서명 포함(법 제30조 준용)
 - 의장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협동조합 가운데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법인)인감도장 날인*
 - ※ 의장과 회장이 다른 경우 (임시)의장과 회장 모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
 - 공증을 위해 (법인)인감도장으로 기명날인할 것을 권장
 - 주요 확인사항
 - 정관, 사업계획과 예산, 임원의 선출,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 등기 시 편의를 위하여 주사무소 주소를 창립총회 의사록에 기재할 것을 권장
 - 임원의 선출방법이 법 제34조(임원) 및 정관에 합치하여야 함
 - 회원인 협동조합의 대표로 이사가 창립총회 의결에 참석한 경우 이사는 별도의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이사가 아닌 조합원이 참석할 경우 협동조합을 대표하여 참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함
 - 창립총회의사록 공증
 - 창립총회의사록은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하며, 공증을 위하여 원본 2부 작성(공증인법 제63조 및 제66조의2)
 - 공증인사무소에 1부 제출, 등기소에 1부 제출
 - 등기소에는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원본 지참 시 사본 제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음(지역 등기소 확인필요)
 - 연합회가 원본을 소장하기 위하여 원본을 3부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 공증준비서류 (공증사무소마다 첨부서류에 대한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

1. 창립총회의사록 원본 2부(법인인감도장 날인 및 간인 필요)
2. 정관
3. 회장의 진술서
4. 회원 명부
5. 회원의 인증 관련 위임장
6. 회원의 법인인감증명

5. 임원명부

- 서식
 - ‘임원명부(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등록번호 기재

- 임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기재
- 법인이 임원인 경우 법인을 대표하여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기재
- 주요 확인사항
 - 임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함
 - 회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로 구성되어야 함
 - 이사 및 감사의 수가 정관에 부합하여야 함
 - 회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되어야 함(총회 의사록에서 확인)
 - 임원이 법 제3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 임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함께 받아야 함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79호)의 서식 활용

6. 사업계획서

- 서식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사업계획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서식 중 “해당연도 사업계획(제2쪽)”란에는 정관에 규정된 모든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계획 및 예산 산출근거 기재
 - 다만, “해당연도 사업계획”이 아닌 경우로서 예산 산출근거를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향후 추진계획만 기재
- 주요 확인사항
 - 정관상 사업 내용이 사업계획서에 모두 기재되어야 함
 - 법 제80조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의 범위에 “금융 및 보험업”이 포함되지 않아야 함

7. 수입지출예산서

- 서식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수입·지출 예산서(시행규칙 제5호서식)’
- 주요 확인사항
 - 수입과 지출의 합계 금액은 일치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상 해당연도에 수행할 사업에 대한 수입과 지출내역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8.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서식
 - 법정 서식은 없으며, 출자 1좌당 금액, 개인별 출자좌수, 총 출자금액 기재
- 주요 확인사항
 - 출자 1좌의 금액이 균일하여야 함
 - 모든 회원이 1좌 이상 출자하여야 함
 - 한 회원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9.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서식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을 준비하고 정관에 기명날인한 협동조합을 발기인으로, 발기인이 아닌 자로서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협동조합을 설립동의자로 구분하여 기재

10.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 서식
 - 법정 서식은 없으며, 사본 제출
 - 총회의사록 작성방법 준용
- 주요 확인사항
 -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연합회가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가 반드시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함(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9호)
 - 법 제56조제1항·제2항(합병 및 분할)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에만 제출(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9호)

※ 참고사항

- 설립인가 신청 시 정관과 창립총회의사록 등 제출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음
 - 다만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원본대조필 도장 날인)하여 제출
- 정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상의 사업내용은 일관성이 있어야 함
 - 일관성이 없을 경우 서류 보완 요청

• 잘못된 작성례

- 정관에 없는 사업을 사업계획서나 수지예산서에 작성
- 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상의 사업명칭을 서로 다르게 작성
- 해당 연도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계획서에는 기재하였으나, 수지예산서에는 기재하지 않은 경우(해당연도 사업계획이 아닌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기재하여야 하나 수지예산서에는 기재할 필요 없음)

다 성립 및 설립무효

법 제19조(협동조합의 설립) 준용

제19조(협동조합의 설립) ①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협동조합의 설립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 협동조합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한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하므로 회원,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연합회 성립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만으로 연합회 설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

상법 제328조(설립무효의 소)

제328조(설립무효의 소) ① 회사설립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86조 내지 제193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상법 제186조-193조

제186조(전속관할) 전2조의 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187조(소제기의 공고)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88조(소의 병합심리) 수개의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제189조(하자의 보완 등과 청구의 기각)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그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협동조합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 또는 취소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제190조(판결의 효력)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2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전에 생긴 협동조합과 조합원 및 제3자 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91조(패소원고의 책임)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협동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92조(설립무효, 취소의 등기)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주된 사무소와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193조(설립무효, 취소판결의 효과) ①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법원의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라 변경신고

법 제71조(설립신고 등) 및 시행령 제7조(협동조합 등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법 제71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행령 제7조(협동조합 등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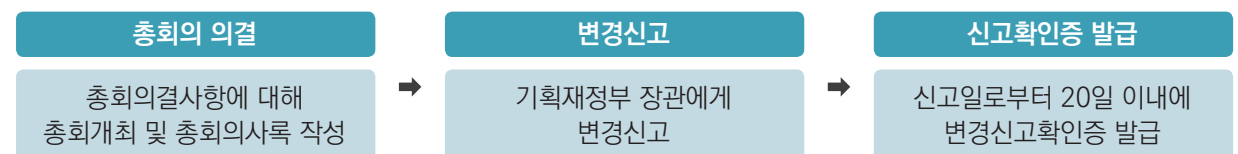
③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본다.

기본방향

- 회원의 권리와 관련된 중요사항은 변경시마다 변경신고, 기타 사항은 연 1회 일괄 신고
 - (중요사항) 정관,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회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 출자감소, 주사무소 주소
 - * 임원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 (기타사항) 중요사항에 해당하지 않은 모든 신고사항
- 중요사항은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 기타 사항은 다음연도 4월말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

변경신고 절차

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중요사항, 기타사항)



① 설립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총회개최 및 의사록 작성(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변경 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

② 회장이 신고인이 되며, ‘협동조합연합회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

- 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의 변경은 설립신고를 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그 효력 발생(법 제16조제3항)

③ 중요사항 변경 시 변경신고확인증(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을 발급하며, 기타사항 변경신고 수리는 공문으로 처리

- 변경신고확인증은 변경신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발급(공휴일 제외)
- 기획재정부장관은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봄
- 변경신고를 접수한 담당자는 변경사항을 “협동조합 행정시스템”에 반영

나. 경영공시를 통해 신고(기타사항)

① 기타사항 변경 시 다음연도 4월말까지 경영공시를 통해 변경신고 가능

- 경영공시 사이트(www.coop.go.kr) 공시 입력페이지 중 ‘변경신고’에 변경사항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변경 신고한 것으로 간주
- * 법상 경영공시 대상이 아닌 협동조합연합회도 자율적으로 경영공시 가능

②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경영공시 내용 확인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공문으로 변경사항 일괄 송부

③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변경사항 통보를 접수한 기획재정부 담당자는 변경사항을 “협동조합 행정시스템”에 반영

변경신고 서류

시행규칙 제6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제6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① 영 제7조제2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변경 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사본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증(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명칭, 이사장 또는 회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시행규칙 제6조제2항)’를 첨부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구분	첨부서류	비고
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예산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공고 및 이의신청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
5	신고확인증	연합회의 명칭, 회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

- 변경사항에 따른 추가 첨부서류

구분	변경사항	추가 첨부서류
1	명칭, 회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가. 신고확인증 1부 나. 명칭 변경시 정관 변경 첨부서류 각 1부 다. 회장 변경시 임원 변경 첨부서류 각 1부 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시 정관 변경 첨부서류 각 1부(정관상 세부주소를 기재한 경우)
2	임원 변경	가. 임원명부(이력서 및 사진 첨부) 1부 나. 임원 선출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1부

구분	변경사항	추가 첨부서류
3	정관 변경	가.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나. 정관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1부 다. 정관 변경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예산서 1부(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 라.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의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출자 1좌당 금액 감소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

03

회원

가

자격 및 가입

법 제73조(회원의 자격)

제73조(회원의 자격) ① 연합회의 회원은 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으로 한다.
②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회원의 자격

- “회원”이란 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을 말함
- 협동조합연합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협동조합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있어 다른 회원 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음
 -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회원 자격 제한 가능

회원의 가입

-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만 회원으로 가입 가능
 - 자연인, 기본법 외의 개별법상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으나,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가능

나

출자 및 책임

법 제16조(정관) 및 제22조(출자 및 책임) 준용

제16조(정관)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제22조(출자 및 책임)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②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④ 협동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협동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 ⑤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76조(준용규정) (일부생략)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30”은 “100분의 40”으로 본다.

출자

- “출자”란 회원이 연합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출연(出捐)하는 행위로, 연합회의 자본금은 회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함
-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함
-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며, 최저·최고 출자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음
- 1개 회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40%를 넘어서는 안 됨(법 제76조)
 - 1개 회원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여 출자하는 경우, 제한을 초과한 출자금은 출자금으로써의 효력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법 제119조제2항제1호)

현물출자

-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 가능
 - 현물출자의 경우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정관에 객관적인 현물출자 자산의 평가방식(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평가액, 공시지가, 시가 등) 기재 가능
 - 설립등기 시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현물출자재산인계서 또는 출자재산영수증(연합회 명의로 발급 가능) 첨부

출자금의 납부

- 출자금은 일시 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음
 - 다만 분할 납부를 할 경우, 출자금 분할 납부방법 및 시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분할납부에 따른 회원의 권리발생 시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

출자금의 사용

- 출자금은 사업운영 등을 위해 사용 가능하며, 개인명의로 사용 금지

-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사용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거나 투기를 목적으로 연합회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하여 연합회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병과 가능)(법 제117조제1항)

출자금과 질권

- 회원이 납입한 출자금은 질권(質權)의 목적이 될 수 없음
 - 연합회의 자본금인 출자금은 회원 탈퇴시 환급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일반기업의 자본과는 다른 성격을 지님
 - ※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무담보로서 채무자나 제3자로부터 인수한 물건을 채무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하여 채무변제를 강제하다가,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그 물건을 현금화하여 우선적으로 담보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

출자금과 채권

- 연합회에 납입한 출자금은 연합회에 대한 채권(債權)과 상계하지 못함
 - 연합회에 가입할 설립동의자가 연합회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자신의 채권과 상계 처리하여 출자금 납입을 갈음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연합회 운영의 기초가 되는 자본금(출자금 납입총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

출자금과 회원의 책임

- 회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하므로 회원에게 출자금 이외에 연합회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요구할 수 없음

다 의결권 및 선거권

법 제75조(의결권 및 선거권)

제75조(의결권 및 선거권) 연합회는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출자좌수 등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다.

의결권과 선거권의 차등부여 가능

- 연합회는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출자좌수 등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 부여할 수 있음

대리인의 선임 불가능

- 연합회의 경우 법 제23조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협동조합에 허용된 것과 같이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 행사하게 할 수 없으며, 업무집행기관인 회원 조합의 이사로 하여금 관련 권한 행사 가능

라 탈퇴

법 제74조(탈퇴)

- 제74조(탈퇴)**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탈퇴

- “탈퇴”란 연합회가 존속하는 중에 회원이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이탈하는 것으로, 탈퇴에 의하여 회원으로서의 지위에서 갖고 있던 일체의 권리·의무 상실
-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음

당연탈퇴 사유

- “당연탈퇴”란 회원에게 기본법상 규정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이 당연히 탈퇴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 사유로 탈퇴
 -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로 당연탈퇴

마 제명

법 제25조(제명) 준용

- 제25조(제명)** ①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한 기간 이상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협동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명”이란 연합회가 특정한 회원에 대하여 회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을 의미

제명사유

- 정관으로 정한 기간 이상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출자, 경비의 납입 등 연합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명절차

-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회원에게 제명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 부여
- 총회에서 총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 찬성의 의결로 제명
 -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회원에게 대항하지 못함

바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법 제26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준용

- 제26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 ④ 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지분환급청구권

- 탈퇴 및 제명 회원은 탈퇴 및 제명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 청구가 가능하며 총회의 의결을 필요
 - “지분”이란 회원이 연합회에 대하여 가지는 몫을 표시하는 계산상의 금액으로 회원의 출자지분은 출자금 등으로 구성
- 지분은 탈퇴 및 제명한 회계연도 말의 연합회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함
- 지분환급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 ※ 다만, 지분의 범위는 추후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명확히 정관에 규정 필요

환급정지

- 연합회는 탈퇴 회원이 연합회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음
 - “채무”란 연합회로부터의 차입금, 선금금, 외상판매대금 등 연합회에 대한 일체의 채무를 의미

사 탈퇴 회원의 손실액 부담

법 제27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준용

제27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지분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 연합회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분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회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 청구 가능
 - (예시) 탈퇴한 회원이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출자액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에 대한 납입 청구 가능

※ 참고사항

- 연합회 운영 중 회원 수가 3개 미만이 되었을 경우에도 이를 법에서 해산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 원칙임(제83조, 제57조)
 - 다만, 법 제14조는 법에 규정한 사항 외는 상법상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연합회에 회원이 없게 된 경우 해산사유이며

- 회원 1개 조합 당 40% 초과 출자를 금지하는 출자금 제한(법 제76조, 제22조)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04 기관

가 총회 및 대의원총회, 이사회

총회

법 제28조(총회) 준용 및 제77조(총회)

제28조(총회) ③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 ⑤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7조(총회) ① 연합회에 총회를 둔다.

- ②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한다.

- “총회”란 회원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연합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연합회 필수기관 및 최고의사결정기관을 의미
 -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의 의장이 됨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 (정기총회)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며,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승인을 위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
 - (임시총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
- 회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 통지

※ 다만, 총회 의결방법으로 서면결의는 불가

총회의 의결사항

법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준용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휴업 또는 계속
 8. 조합원의 제명
 - 8의2.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9.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10.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1.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총회 의결정족수

총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총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1. 정관의 변경 2. 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휴업 또는 계속 3. 회원의 제명 4. 탈퇴회원(제명된 회원 포함)에 대한 출자금 환급 5.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1.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2. 임원의 선출과 해임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4. 결산보고서의 승인 5. 감사보고서의 승인 6.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연합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117조제2항제3호)

대의원총회

법 제31조(대의원총회) 준용

제31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하는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 ②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③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 ④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 ⑤ 대의원의 임기, 선출방법 및 자격 등 대의원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⑥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협동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 회원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 구성 가능(시행령 제9조)
 - “대의원총회”란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총회에 갈음하여 연합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
- 회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
 -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회원 총수의 10% 이상(다만,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정할 수 있음)
-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이 행사할 수 없음
- 연합회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 의결사항으로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할 수 없음
-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사항
 - 회장과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의장이 됨
 -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 관한 사항
 - 회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전·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 통지

이사회

법 제32조(이사회) 및 제33조(이사회 의결사항) 준용

- 제32조(이사회)** ① 협동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에 이사회 의 개의 및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인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이사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3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협동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법령 또는 정관으로 이사회 의결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이사회”란 연합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
 - 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
 -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의결사항
 - 연합회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 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등
- 회원 수가 10인 미만인 연합회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 이사회를 두지 않을 수 있음
 - 이 경우 정관에 법 제33조의 이사회 의결사항 중 회장이 결정할 사항과 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을 명시

나 임원

임원

법 제34조(임원) 준용 및 제78조(임원)

- 제34조(임원)** ① 협동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 ② 이사의 정수 및 이사·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④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그 조합원인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격, 조합원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8조(임원)**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 연합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
- 임원은 회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로 구성
- 회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
- 회원에 속한 조합원인 법인도 임원으로 선출가능, 이 경우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회원에게 통지
 - 다만, 현재 법인세법 109조에서 법인 설립 시 세무서에 “대표자의 성명”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세청 시스템 상 자연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연인을 회장으로 선출하도록 권고
 - 감사는 회사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이사 직무의 집행을 감사하는 것이 주된 직무이므로 자연인으로서의 의사 및 능력이 필요

임원의 임기

법 제35조(임원의 임기 등) 준용

- 제35조(임원의 임기 등)**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함
- 회장은 2번만 연임이 가능하며,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음
 -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최초 개시되는 임기(4년의 범위 내)를 제외하고 추가로 두 번 더 연임이 가능하다는 의미*
 - * 임원의 임기가 4년, 2차에 걸쳐 연임하는 경우 한 번에 최대 12년까지 재임 가능
- 결원이 발생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전임임원이 신규임원 선출 전까지 임원의 직무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
-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
 - 다만, 임기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결원에 따른 임원을 선출하지 않을 수 있음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법 제3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준용

- 제3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협동조합은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 연합회는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
 - (기능) 후보자의 자격심사, 선거인명부의 확정, 선거인자격 이의신청에 대한 판정, 선거 관련 분쟁 조정, 선거운동방법 위반여부의 심사, 위반 사례 발생에 대한 조치 등
 - (구성) 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 위촉기간, 자격상실 규정
 - (운영) 위원장 및 위원의 선출방법 및 역할 등

임원 등의 결격사유

법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준용

-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동조합의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직된다.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 ‘e하나로민원’의 ‘결격사유 유무 조회’ 사무를 통해 조회
 - 법인이 임원인 경우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선임된 사람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
 - ‘결격사유 유무’는 대상자의 등록기준지가 속한 기초자치단체에 의뢰하는 것도 가능
- 외국인이 임원인 경우, 국내체류기간에 대한 범죄경력에 대해서만 조회 가능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경찰청으로 외국인의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국적을 기재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조회 의뢰

결격사유 발생시 처리

- 임원의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법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직
- 퇴직된 임원이나 법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음

임원의 의무와 책임

법 제39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준용

- 제39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 의결을 준수하고 협동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회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 임원의 의무

- 임원은 법령 및 총회·이사회 의결을 준수하고 연합회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 수행해야 함

• 임원의 책임

-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연합회에 손해를 가한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
-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제3자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
- 임원이 연합회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가 이사회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회도 연대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임원이 연합회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에 해당되는 사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봄

임원의 해임

법 제40조(임원의 해임) 준용

- 제40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79조(준용규정)** 연합회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부생략) 제40조제1항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보며, (후단생략)

- 해임의 구체적인 사유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나,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법령 및 정관의 위반 시 해임

• 해임절차

- 회원은 회원 1/3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 요구 가능(법 제40조, 제79조)
- 연합회는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 부여
- 총회는 총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원의 해임 결의

회장 및 이사의 직무

법 제4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준용

- 제4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협동조합을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협동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 (회장) 연합회를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의 업무 집행

- (이사) 연합회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 대행

- 회장의 사고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및 회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만 이사가 연합회를 대표할 수 있음

감사의 직무 및 감사의 대표권

법 제42조(감사의 직무) 및 제43조(감사의 대표권) 준용

- 제42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협동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예고 없이 협동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확인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 제34조제5항에 따라 감사를 두지 아니하는 때에는 총회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제43조(감사의 대표권)** ① 협동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협동조합을 대표한다.
- ② 제34조제5항에 따라 감사를 두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소송을 하는 때에는 협동조합,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협동조합을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 “감사”는 연합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감사를 주된 기능으로 수행하는 연합회의 필수기관으로서,
 - 회계지식을 갖추고 중립성을 견지할 수 있는 자를 감사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
- 감사의 직무
 - 연합회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
 - 예고 없이 연합회의 장부나 서류 대조·확인 가능
 - 회장 및 이사가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이사회에 시정요구
 -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 감사의 대표권
 - 연합회가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경우 감사가 연합회를 대표함

다 임직원의 겸직금지

임원의 겸직 관련 준용 법령

- 법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 ③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은 사업의 성격과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 ⑤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시행령 제10조(협동조합 등 임직원의 겸직) 법 제44조제4항(법 제7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본다)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동조합연합회의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임원이 직원을 겸직하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3. 그 밖에 협동조합의 규모·자산·사업 등을 고려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임원은 직원을 겸직할 수 없음(법 제44조 제3항 준용)
- 다만,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에는 임원이 직원 겸직 가능

참고 |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결격사유 조회 방법

- ①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 ‘e하나로민원’을 통해 대상자의 결격사유 확인 가능
 - ‘결격사유 유무 조회’ 사무에 대한 열람권한을 부여받은 후, 열람하고자 하는 결격사유 대상자에 대한 내부결재를 득한 뒤 조회 가능
 - ‘결격사유 유무 조회’로는 결격사유의 해당여부만 조회가능하므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대상자의 등록기준지로 의뢰하여 구체적인 결격사유를 확인
- ② (공문으로 확인하는 경우) ‘성명, 주민번호, 등록기준지(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음)’를 대상자의 등록기준지가 속한 기초자치단체에 공문으로 요청
 - 등록기준지 최소단위구역이 ‘읍·면’인 경우 읍·면장에게, ‘동’인 경우에는 시장·구청장에게 의뢰

외국인 임원 결격사유 조회

- 외국인이 임원인 경우 신원조치는 불가하나, 국내체류기간에 대한 범죄경력에 대해서는 확인 가능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해당지자체가 속한 지방경찰청으로 범죄경력조회 의뢰(성명, 외국인등록번호, 국적을 기재하여 조회 의뢰)

※ 신원조회 의뢰 공문

「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 수리에 필요한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귀 시·구·읍·면에 등록기준지를 둔 대상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기록사항을 조회요청하오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범죄경력조회 의뢰 공문

「협동조합기본법」 제36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라 범죄경력 확인을 위해 붙임과 같이 범죄경력조치를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선거운동의 제한

법 제37조(선거운동의 제한) 준용

제3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을 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 ③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79조(준용규정) 연합회의 기관에 관하여는 (일부생략) 제37조 중 “조합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 “선거운동”이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의사표시 등은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음
- 선거운동제한은 협동조합연합회의 임직원, 회원에 속한 조합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적용

선거운동의 제한 사항

- 금품 등의 제공금지 등
 - 회원에 속한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금품 등의 제공 금지

-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금품 등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위하여 회원에 속한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음
 - 협동조합기본법 상,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회원에 속한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음
 -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이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117조제3항)
 -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을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기본법 제37조 제2항과 동일 취지의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은 처벌 대상 행위가 법으로 예측가능하지 않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8헌가12)을 받았음
- ※ 따라서 정관에는 동일 취지의 조항이나 기간을 명확히 명시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제2항 규정을 참고하여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으로 규정하는 것을 권고
-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음
-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의 배부, 소형 인쇄물의 배부,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전화·팩스·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법 제37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117조제3항)

05 사업

가 사업의 내용

법 제80조(사업)

제80조(사업) ① 연합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2.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3.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사업

② 연합회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연합회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연합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함

- 연합회는 정관상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정관에 연합회 고유의 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 정관상 사업이 연합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인지 판단
- 연합회의 사업이 연합회의 설립목적, 명칭, 회원 구성 등과 맞지 않게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완 요구

필수 포함 사업

- 회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사업

연합회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

연합회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음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금융 및 보험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근거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업종은 ‘참고’에 적시되어 있음
- 협동조합의 장례서비스 제공대상이 조합원으로 한정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협동조합의 조합원대상 상조사업 운영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유권해석

(주)○○○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해당여부

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기본적으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임

나. ○○○연합회 선불식 할부거래회사 설립규약 및 ○○○협동조합연합회 상포계 규약 등에 따르면 (주)○○○는 회원조합 조합원에게 상포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귀 연합회가 100% 주식을 소유하는 형태로 설립된 회사이며, (주)○○○를 통해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은 일반 소비자가 아닌 회원조합 조합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다. 따라서 현행 ○○○협동조합연합회 정관, 선불식 할부거래회사 설립규약 및 상포계 규약에 의하면 (주)○○○는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으므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참고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통계청고시 제2017-13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업	은행 및 저축기관	중앙은행	중앙은행
			일반은행	국내은행 외국은행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	신용조합
				상호저축은행 및 기타 저축기관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기타 금융 투자업
		기타 금융업	여신금융업	금융리스업
				개발금융기관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
			그 외 기타 금융업	기금 운영업
				지주회사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보험업	생명 보험업	생명 보험업
			손해 및 보증 보험업	손해 보험업
				보증 보험업
		사회보장 보험업	건강 보험업	건강 보험업
				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 보험업
		재 보험업	재 보험업	재 보험업
		연금 및 공제업	연금 및 공제업	개인 공제업
				사업 공제업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금융지원 서비스업	금융시장 관리업	금융시장 관리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증권 중개업
				선물 중개업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증권발행, 관리, 보관 및 거래지원 서비스업	증권발행, 관리, 보관 및 거래지원 서비스업
				투자 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손해 사정업
				보험 대리 및 중개업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나 사업의 이용

법 제81조(사업의 이용) 및 시행령 제11조(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법 제81조(사업의 이용) ① 연합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80조의2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11조(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법 제46조 및 제8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
2. 그 밖에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성격·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사업의 이용이란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회원 협동조합이 연합회의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의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될 수 있음
- 회원의 공동이익 도모를 위한 연합회는 법 제80조의2에 따른 공제사업을 제외하고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도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음
-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봄
 - 다만, 공제사업은 회원들의 상부상조를 위한 사업으로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공제사업 이용 불가

다 공제사업

법 제80조의2(공제사업) 및 시행령 제16조(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

법 제80조의2(공제사업) ① 제8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합회는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회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회원들이 각자 나누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의 한도 내에서 공제료를 낸 회원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②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요건 및 절차 등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행령 제16조(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 ① 법 제80조의2(법 제115조제2항 또는 제115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2항 전단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가 공제사업의 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회원 수가 10인 이상일 것
2.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② 법 제8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공제사업의 인가를 신청하려는 협동조합연합회는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에 공제규정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법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80조의2에 따른 공제사업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제사업 인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공제규정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⑥ 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실시방법
2. 공제계약의 내용
3. 공제료

⑦ 법 제8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협동조합연합회는 공제사업 인가 변경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 신청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규칙 제13조(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시행규칙 제13조(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①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공제규정 사본
3. 공제규정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공제사업 계획서
5. 공제사업 수입·지출 예산서
6. 출자 1좌당 금액과 회원별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③ 영 제16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 인가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16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공제규정 사본
3. 공제규정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공제사업 계획서
5. 공제사업 수입·지출 예산서
6. 출자 1좌당 금액과 회원별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공제사업”이란 회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회원들이 각자 나누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의 한도 내에서 공제료를 낸 회원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 회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 사업 제외
- 공제료를 납입한 회원 협동조합만 공제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회원에 속한 조합원은 공제사업의 대상이 아님

공제사업 인가 및 인가요건

-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 회원 수가 10인 이상이고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 이상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시행령 제16조제1항)

공제사업 인가 절차(시행령 제16조제2-8항)

① 총회개최 공고 및 총회개최

- 총회개최 전 7일 이상 총회개최 공고
- 총회에서 공제규정 의결(일반정족수)

구분	공제규정 포함사항
1	공제사업의 실시방법
2	공제계약의 내용
3	공제료

② 공제사업인가 신청서 제출

- ‘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인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공제규정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구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1	정관 사본
2	공제규정 사본
3	공제규정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공제사업 계획서
5	공제사업 수입·지출예산서
6	출자 1좌당 금액과 회원별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③ 인가여부결정 및 통보

- 기획재정부장관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보(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활용)

- 필수 기재사항 누락, 첨부서류 미제출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인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회원 수가 10인 미만이거나,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및 공제규정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이외에는 인가

공제사업인가 변경신청(시행령 제16조 제7항 및 제8항)

- 공제사업의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공제사업인가 변경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
- 공제사업인가 변경신청에 대한 인가는 공제사업 인가절차 준용

구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1	정관 사본
2	공제규정 사본
3	공제규정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공제사업 계획서
5	공제사업 수입·지출예산서
6	출자 1좌당 금액과 회원별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참고 | 공제규정 예시

- 제1조(목적)** 00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공제회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상호부조와 복리증진 및 지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이 공제회는 00협동조합연합회공제회(이하 “00공제회”라 한다)라 한다.
- 제3조(사무소)** 00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주소:00시 00구 00로 00)에 둔다.
※ 주된 사무소가 연합회의 사무소와 동일한 경우에는 “00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연합회의 주된 사무소로 한다”로 규정할 수 있음
- 제4조(회원)** 00공제회의 회원은 연합회의 회원 중 공제계약을 체결한 회원으로 한다.
- 제5조(자격취득)** 회원은 공제회의 가입절차에 따라서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그 자격을 취득한다.
- 제6조(권리의무)** ① 회원은 공제계약과 공제료를 납입할 의무가 있으며, 공제회로부터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②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탈퇴한 때에는 납부한 공제료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제7조(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공제계약의 해지
2. 연합회의 탈퇴
3. 협동조합의 해산
4. 제명
5.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공제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제8조(제명)**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1. 공제회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제회의 재산상 손실을 자초오게 한 회원
3. 그 밖에 연합회 정관이나 공제규정을 위반한 회원
- 제9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1. 회장 1명
2. 연합회 총회에서 추천한 위원 0명
※ 조직의 규모 등을 생각하여 적절한 위원으로 구성
② 운영위원의 임기는 0년으로 한다.
※ 일반적으로 2-3년의 임기를 정하도록 함
③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정족수는 각 공제회의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음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공제회 임원의 선출
2.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3. 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
※ 각 연합회와 공제회의 특성에 맞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

제10조(임원)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이사 0명 이내
 3. 감사 2명 이내
- ② 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연합회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선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음
- ③ 이사는 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 선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음
- ④ 감사는 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선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음
- ⑤ 회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 ⑥ 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분장업무를 처리한다.
- ⑦ 감사는 연 1회 이상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 ⑧ 이사 및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⑨ 임원의 임기는 0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새로이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 임기는 일반적으로 2-3년으로 함.
- ⑩ 임원의 결격사유는 연합회 임원의 결격사유를 준용한다.
- ⑪ 임원은 공제회 이외의 다른 영리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운영위원회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⑫ 임원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임원은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 그 밖에 필요한 관련 규정은 각 연합회와 공제회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음

제11조(사무부서) ① 공제회의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부서를 둘 수 있다. 사무부서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을 정한다.

- ② 공제회 사무부서의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사업) ① 공제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긴급)금융 지원사업
 2. 공제회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공제회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사업
- ② 공제회는 회원을 위한 보증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공제회는 회원 소속 협동조합의 조합원을 위한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자산운용기준) 공제회는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자산운용업무 수행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자산운용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14조(공제계약) ① 공제회는 공제회의 회원으로 참여하는 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공제회는 공제계약을 위한 별도의 표준계약을 작성하여야 한다.
※ 공제계약의 구체적인 사항을 적시할 수 있음
※ 구체적인 지원 내용 등은 각각의 공제회의 특성에 따라 공제계약의 구체적 내용으로 정하여질 것임

제15조(공제료) ① 회원은 공제계약에 따라 정해진 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의 공제료는 좌수제로 하며, 1구좌당 00만원으로 한다.

제16조(회계) ①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1년으로 한다.

- ② 공제회의 경비는 사업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③ 공제회는 매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개시되기 1개월 전에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공제회는 매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회계규정에 따라 결산하고 결산보고서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합회의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공제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 시 회원에게 지급할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 ⑥ 공제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시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립금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준비금의 보전과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규정의 변경) 공제회의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해산) ① 공제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연합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공제회를 해산한 때에는 그 남은 재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합회의 인가를 받아 처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공제회 설립을 인가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06 회계

가 회계

회계연도

법 제47조(회계연도 등) 준용

제47조(회계연도 등) ① 협동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협동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분은 정관으로 정한다.

- “회계”란 재산의 증감·변동·수입과 지출·처리 등 재무에 대한 처리를 말하며, “회계연도”란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는 기간으로서 통상 1년을 1회계연도라고 함
- 연합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별 사업부분은 정관으로 정함
 - (일반회계) 연합회의 일반적 업무활동에 관한 사항 계리
 - (특별회계)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별자금을 보유·운영할 때,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사용 가능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법 제48조(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준용

제48조(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운영의 공개

법 제49조(운영의 공개) 준용

제49조(운영의 공개) ① 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3. 조합원명부
4. 회계장부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협동조합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③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회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 운영의 공개 사항

- ①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 ②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 ③ 회원 명부
- ④ 회계장부
- ⑤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협동조합연합회는 운영의 공개사항을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연합회의 채권자 및 회원은 이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 청구 가능

- 원칙적으로 정보공개 시, 운영의 공개 사항 중 회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은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1호)
- 예외적으로 ① 정보 공개로 회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② 정보 공개 시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③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공개 가능함(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2)

• 연합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서류비치를 게을리한 때,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119조제3항제2,3호)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법 제50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준용

제50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적립(이하 “임의적립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정적립금”이란 법령에 의해 적립이 강제되어 있는 적립금

-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 이상 적립
- 연합회는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이외에는 법정적립금 사용 금지

※ 법정적립금 관련 용어

구분	내용
잉여금	순재산액이 법정자본금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회계상 당기순이익
잉여금의 종류	자본잉여금 : 자본거래를 통해 발생
	이익잉여금 : 영업활동 등 손익거래를 통해 발생
순재산	총자산으로부터 총부채를 뺀 것으로, 자본준비금 · 이익준비금 · 이익 잉여금 등의 합계액으로 자기자본(출자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합산하여 산정)이라고도 함
법정자본금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회사가 유지하여야 할 최소한의 자본으로 협동조합의 경우 출자금 총액을 법정자본금으로 간주

- “임의적립금”이란 연합회가 임의로 적립한 것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가능
 - 사업준비, 시설확장, 사업활성화, 결손보전 등으로 사용가능

손실금의 보전

법 제51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준용

제51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 “손실금(당기손실금)”이란 총수익이 총비용보다 적은 경우 발생하는 금액
-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당기손실금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잉여금의 배당

법 제51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준용

제51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50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잉여금 배당의 경우 협동조합 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협동조합연합회가 손실금을 보전하고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 배당 가능
 - 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를 초과하여서는 안 됨
 - 배당세율은 배당소득의 14%(「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
- 잉여금의 배당은 총회나 이사회가 필수결사항이 아니므로 정관에 세부적으로 정하되, 모든 사항을 정관에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 규약에 일부를 정할 수 있음

결산보고서의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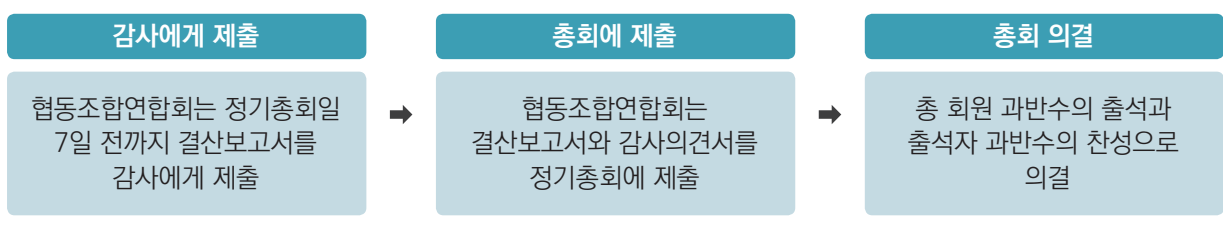
법 제52조(결산보고서의 승인) 준용

제52조(결산보고서의 승인) ① 협동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결산보고서의 종류
 - 사업결산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

결산보고서 승인 과정



출자감소의 의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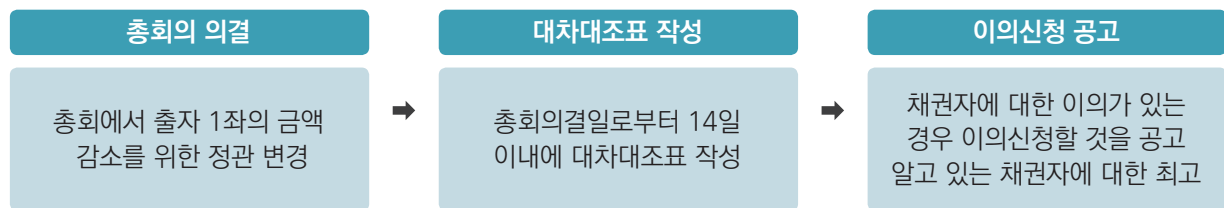
법 제53조(출자감소의 의결) 준용

제53조(출자감소의 의결) ① 협동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의 기간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총회의 의결
 -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총회에서 정관을 변경
 - 정관의 변경은 총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대차대조표의 작성
 - 총회에서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연합회는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함
- 이의신청 공고 및 채권자에 대한 공고
 - 대차대조표 작성기간(14일) 동안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에 이의신청할 것을 공고
 -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 최고의 효력발생 시기는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민법 제111조제1항)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법 제54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준용

- 제54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53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협동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채권자가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봄
 -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연합회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출자지분 취득금지 등

법 제55조(출자지분 취득금지 등) 준용

- 제55조(출자지분 취득금지 등)**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연합회는 회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회원의 외상거래에 대한 담보로 설정하는 등)으로 하여서는 안 됨

나 경영공시

경영공시 관련 법령

- 법 제49조의2(경영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은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시·도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
 4.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포함한 사업결과 보고서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협동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동조합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12조(협동조합 등의 경영공시)** ① 법 제49조의2(법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1.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
 2.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에 적힌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
- ② 협동조합은 조합원 수가 변경되어 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이 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 제4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해야 한다.

- 시행규칙 제8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 ①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49조의2제1항제2호의 사업결산 보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 ②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49조의2제1항제3호의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의 통합 공시 서식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 ③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49조의2제1항제4호의 사업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경영공시 대상

-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사업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 원 이상인 협동조합연합회
 -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 조합원 수가 200인 미만이거나,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 원 미만인 연합회도 자율경영공시는 가능함
- 경영공시 대상에 해당하는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하단의 경영공시 자료를 공시(법 제49조의2 제1항 각호)
 - 연도 중 설립된 연합회도 자율경영공시 가능
- 자율경영공시 대상 연합회에 대해서는 운영의 민주성·투명성을 고려해 시·도 사업 등 참여 시 정책적 지원 권고

경영공시 자료 및 게재방법

구분	내용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의 정관을 게재하며 정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정관을 게재 • 정관에 발기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이를 삭제하고 게재
사업결산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 직전 회계연도 ‘수입 · 지출예산서’ 상의 예산과 ‘사업결산 보고서’ 상의 항목 및 예산액이 일치하도록 작성 • 수입과 지출의 합계 금액이 일치하도록 작성 <p>※ 연도중 설립된 연합회는 해당없음</p>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활동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 창립총회 포함
사업결과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사업결과 기재 <p>※ 연도중 설립된 연합회는 해당없음</p>

경영공시 방법

- 총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시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협동조합 홍보포털) 에 공시(시행령 제12조제3항)

경영공시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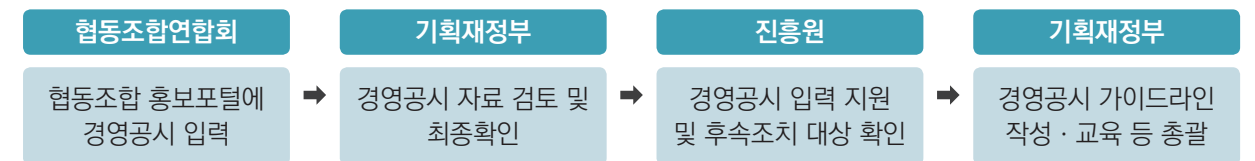
- 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 홍보포털 홈페이지에 정관, 사업결산보고서, 사업결과보고서, 총회 · 대의원총회 · 이사회 활동 상황 등을 등록

- 정관 등 경영공시 자료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핸드폰 연락처, 주소 등)가 포함되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 기획재정부
 - 관할 연합회 중 경영공시 대상(전체 회원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이거나 출자금 총액이 30억 원 이상)을 파악
 - 관할 연합회에서 등록한 정관, 사업결산보고서 등 경영공시 자료의 첨부 여부 확인
 - 경영공시 첨부자료와 시스템에 입력한 데이터의 일치여부 확인
 - 경영공시 자료 검토 후 미비한 사항은 연합회에 통보하여 보완
 - 관할 연합회의 경영공시 의무(공시기한, 허위사실 게재 등) 준수 여부, 협동조합기본법 및 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시정명령, 과태료 및 벌칙 부과 등 조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중간지원기관
 - 경영공시 대상 협동조합연합회의 공시 이행을 위한 결산 · 총회 개최 관련 법인 운영 실무 교육 및 경영공시 입력 지원
 - 공시 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쳐 협동조합기본법 위반 소지가 있는 후속조치 검토 필요 대상을 기획재정부에 전달

- 기획재정부
 - 경영공시 가이드라인 작성 및 교육 등 경영공시 제도 총괄
 - 경영공시 시스템 개선 · 관리 및 제도 개선



-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합 경영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협동조합연합회에 요구할 수 있고, 연합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함
- 경영공시를 게을리 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119조제3항)
 - ※ 자세한 사항은 「경영공시 가이드라인」을 참고

참고 1 | 회계기준

총칙	회계연도	연합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함
	기록보존기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10년간 보존 다만, 전표 등은 5년간 보존
	회계처리원칙	모든 회계처리는 계정과목에 의하여야 하며,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는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
	전결	경상비의 지출에 관한 사항은 이사의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전결규정 제정 가능
예산	예산총계주의	연합회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입하여 처리
	예산편성	매 회계연도마다 이사회에서 편성
	예산의 구분	예산은 자본예산과 경상예산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예산의 변경	예산이 성립된 후에 생긴 사업계획의 변경 등 예산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
	예산불성립시 예산집행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년도의 동기간 예산에 준하여 경상비 지출 가능. 다만,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을 넘을 수 없음
	예비비 사용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미리 예산에 계상한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침
결산	결산서의 작성	결산은 예산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작성하여야 하며, 총회 제출 전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함
	계정이월	회장은 매 회계연도 말 각 계정잔액에 대한 실사를 필하고 총계정원장의 모든 계정을 마감하여 각 계정 잔액을 차기년도로 이월

※ '중소기업 회계기준' 일부 준용

수입과 지출	수입금 징수	수입은 출자금, 회비 등으로서, 수지예산서에 계상된 바에 의함
	지출의 절차	모든 지출은 수지예산서의 사업별 및 계정과목별로 지출 함을 원칙으로 함
장부	장부의 종류	주요부(전표, 총계정 원장), 보조부(각 계정 보조부)
	기장원칙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 처리
	전표의 작성	전표는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작성. 전표에는 영수증, 청구서, 견적서, 수입 및 지출 결의서 등 제증빙 서류 첨부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과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1호와 제158조제2항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 1. 신용카드 매출전표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4.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전표의 정리	전표는 매월 분을 취합하여 회장이 날인

출자 및 자본	자본의 구분	자본은 출자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분
	출자금	출자금은 현금출자와 현물출자로 구분
	현물출자	현물출자의 대상은 대차대조표에 기재할 수 있는 모든 자산으로 하며, 출자 시에 출자의 목적물 전부를 일시에 조합에 인도하여야 함. 현물에 대한 가격의 결정에는 전문기관의 인정이나 가격표 또는 공정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
	자본잉여금	회원과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으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차익 포함 자산재평가차액은 결손에 보존하거나 출자금으로 전입하는 외에는 처분하지 못함
	이익잉여금의 처분	이익잉여금은 손실금을 보전하고,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배당금, 이월금 등에 사용
	지분의 계산	연합회의 재산에 대한 회원의 지분은 납입출자금 및 사업의 이용분량에 따라 정관이나 규정으로 정할 수 있음

참고 2 | 경영공시 주요 항목별 체크리스트(예)

검토내용	서식	확인사항
(공시 의무) 정관, 규약, 규정	자체 양식	(정관) 설립 및 변경신고 된 최신 정관과 일치 여부
		작성 내용과 회계원장, 재무제표 등과의 일치 여부
(공시 의무) 사업결산보고서	별지 제9호	정관의 사업명칭을 기준으로 한 구분기장 이행 여부
		작성 내용과 회계원장, 재무제표 등과의 일치 여부
(공시 의무)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활동상황	별지 제10호 서식	의결기구의 개최 횟수(총회, 대의원 총회, 이사회 포함)
		작성 내용의 실제 의결 여부(날인된 의사록 구비여부)
		의사록의 적법성 여부(공고기간, 성원요건 도달여부)
(공시 의무) 사업결과보고서	별지 제11호	정관의 사업명칭을 기준으로 한 실적 관리 이행여부
설립신고 요건 충족 여부	해당 없음	설립동의자(회원조합) 3법인 이상
별치 해당 여부	해당 없음	금융업 및 보험업 사업 영위
		법정적립금의 적립 여부와 비율
		손실의 보전 및 해산 외에 법정적립금 사용
		총회 의결사항의 의결 실시 여부
과태료 해당 여부	해당 없음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 한 때(경영공시 지연, 부실)

07 합병 및 분할, 해산 및 청산

가 합병

법 제56조(합병 및 분할) 및 시행규칙 제9조(협동조합등의 합병신고) 준용

- 법 제56조(합병 및 분할)** ① 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 ② 협동조합이 합병할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은 합병신고를, 분할 후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설립신고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신고를 각각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 ⑤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합병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⑥ 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 ⑩ 제7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9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신고) 법 제56조제2항(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사본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
5. 합병 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합병 후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합병되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가 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9. 합병되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가 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0.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합병의 정의 및 유형,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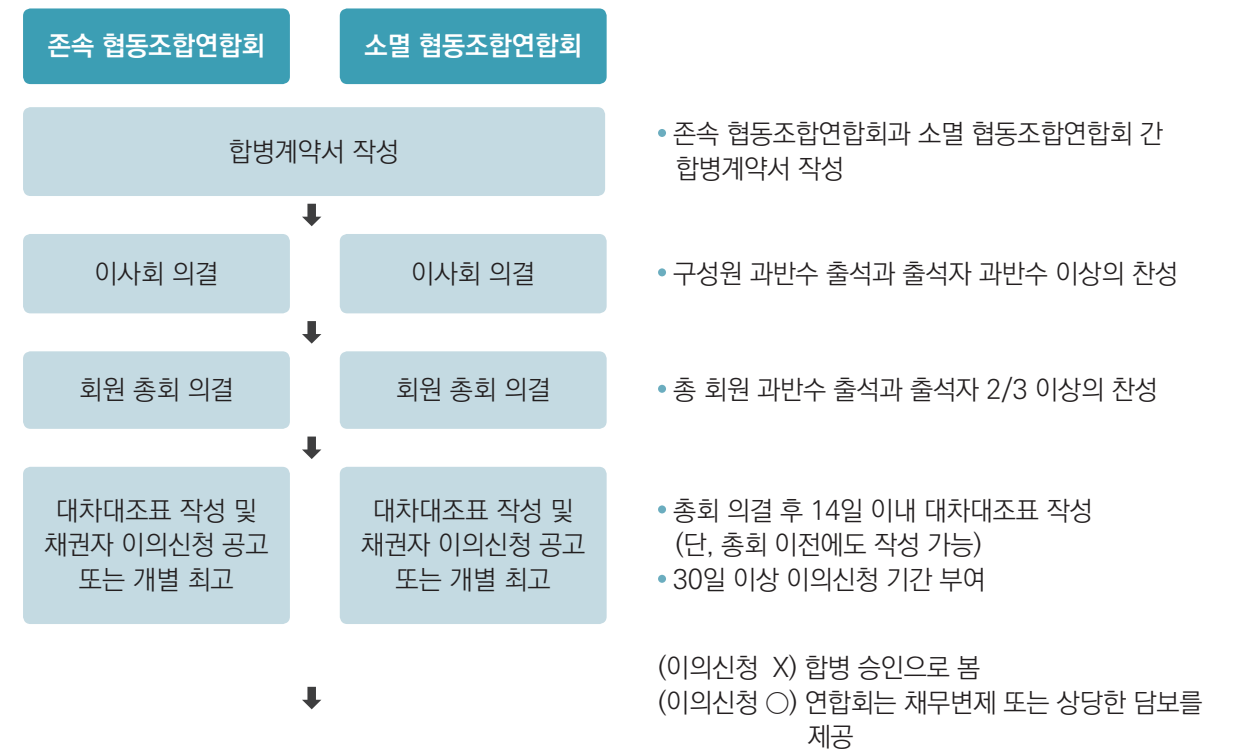
- “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협동조합연합회가 청산절차 없이 하나의 협동조합연합회로 통합되는 절차
 - “흡수합병”이란 하나 이상의 협동조합연합회가 존속하면서, 소멸되는 다른 연합회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A+B=A)
 - “신설합병”이란 기존의 모든 협동조합연합회가 소멸하면서, 새로운 연합회를 설립해 사원 및 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A+B=C)
- 합병 후 존속·설립되는 협동조합연합회가 소멸되는 연합회의 권리·의무(공법상 권리의무, 회원의 수용, 소송절차 수계 등 포함)를 청산절차 없이 포괄적으로 승계(법 제56조제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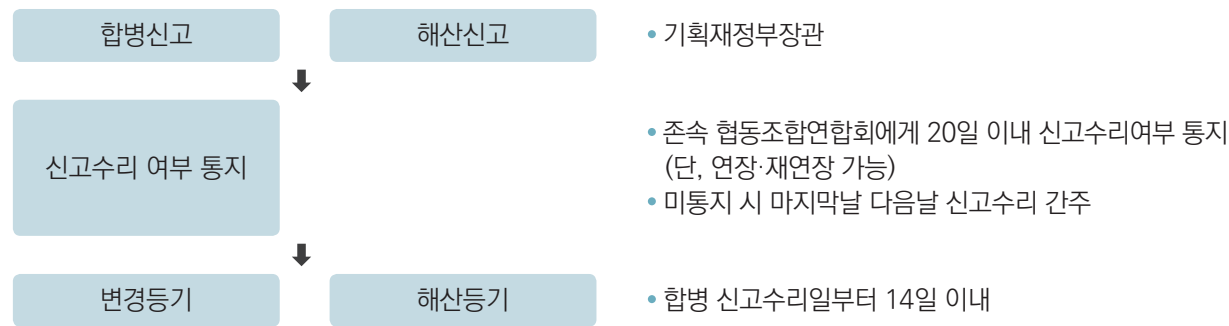
합병 관련 유의사항

- 협동조합기본법은 상법과 달리 합병 반대 회원의 지분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합병에 반대하는 회원은 연합회 탈퇴 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법 제26조)

흡수합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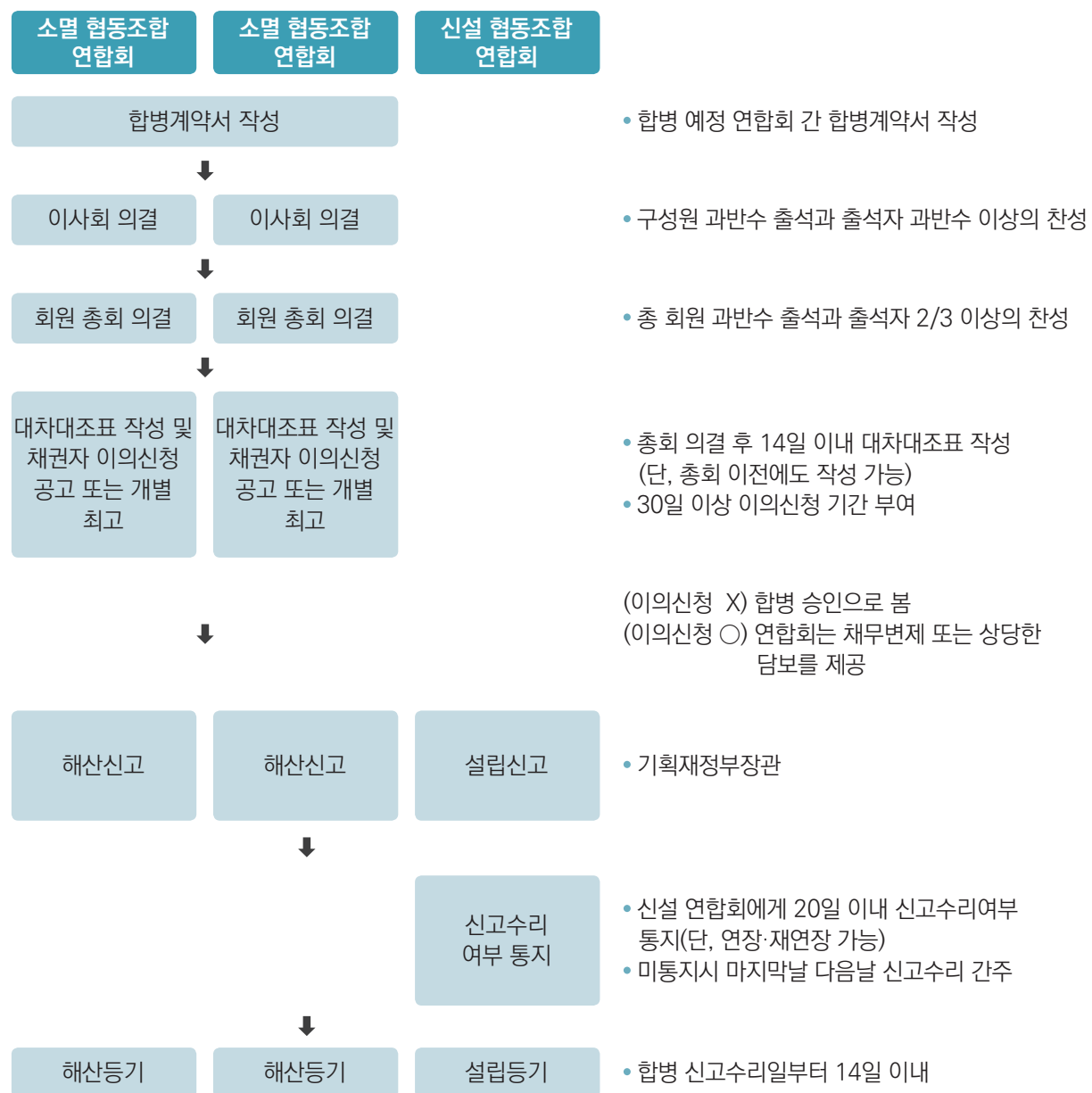
- 흡수합병 절차





신설합병

• 신설합병 절차



합병 세부절차

- ① 합병계약서 작성(법 제56조 제1항)
 - 합병당사자 협동조합연합회 간의 합병계약의 주된 내용 기재
- ② 이사회 의결(법 제79조, 제33조제2호)
 - 합병계약서의 승인 및 회원 총회의 소집과 총회 의안(합병승인) 상정을 위한 이사회 의결
- ③ 회원 총회(법 제79조, 제29조 제1항 제7호 및 제2항)
 - 회장은 각 회원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총회소집 통지
 - 총 회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④ 대차대조표 작성 및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법 제14조 제1항, 상법 제232조)
 - 각 합병 예정 연합회들의 각 총회 의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 작성(단, 총회 이전에도 작성 가능)
 - 대차대조표의 작성기준시점은 합병기일(총회 전/후로 작성하였더라도, 합병기일까지의 변동사항 추가 반영 필요)
 - 총회 의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가 일정기간(30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함)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i) 공고하거나 ii)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
 - 이의신청이 있으면 연합회는 채무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단, 이의신청이 없으면 합병 승인으로 봄)
- ⑤ 신고(법 제56조제2항, 제4항)
 - 기획재정부장관에 신고

연합회 유형	신고의 종류
존속하는 협동조합연합회	합병신고
소멸하는 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
신설되는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

- ⑥ 신고수리 여부 통지 및 신고확인증 발급(법 제56조제5항)
 - 기획재정부장관은 합병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
 - * 신고확인증(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활용) 발급

-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연장·재연장 기간 포함)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한 것으로 봄

⑦ 합병등기(법 제65조)

- 합병신고를 수리(신고수리 간주일 포함)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

연합회 유형	등기의 종류
존속하는 협동조합연합회	변경등기
소멸하는 협동조합연합회	해산등기
신설되는 협동조합연합회	설립등기

⑧ 사업자등록

연합회 유형	사업자등록
존속하는 협동조합연합회	사업자등록정정
소멸하는 협동조합연합회	폐업신고
신설되는 협동조합연합회	사업자등록신청

합병 신고 서류

- 합병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구분	신고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합병계약서 사본 1부
3	합병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명부(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1부
5	합병 후의 사업계획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1부
6	합병 후의 수입·지출예산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1부
7	출자1좌의 금액과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1부
8	합병되는 협동조합연합회가 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1부
9	합병되는 협동조합연합회가 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10	채권자의 이의신청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나 분할

법 제56조(합병 및 분할) 및 시행규칙 제6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법 제56조(합병 및 분할) ① 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협동조합이 합병할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은 합병신고를, 분할 후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설립신고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신고를 각각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합병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⑩ 제7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6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① 영 제7조제2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변경 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사본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증(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명칭, 이사장 또는 회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협동조합은 다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사실을 주소가 변경되기 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협동조합 설립신고 시 제출받은 서류를 새로운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경우로서 변경신고한 사항이 법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분할의 정의 및 유형,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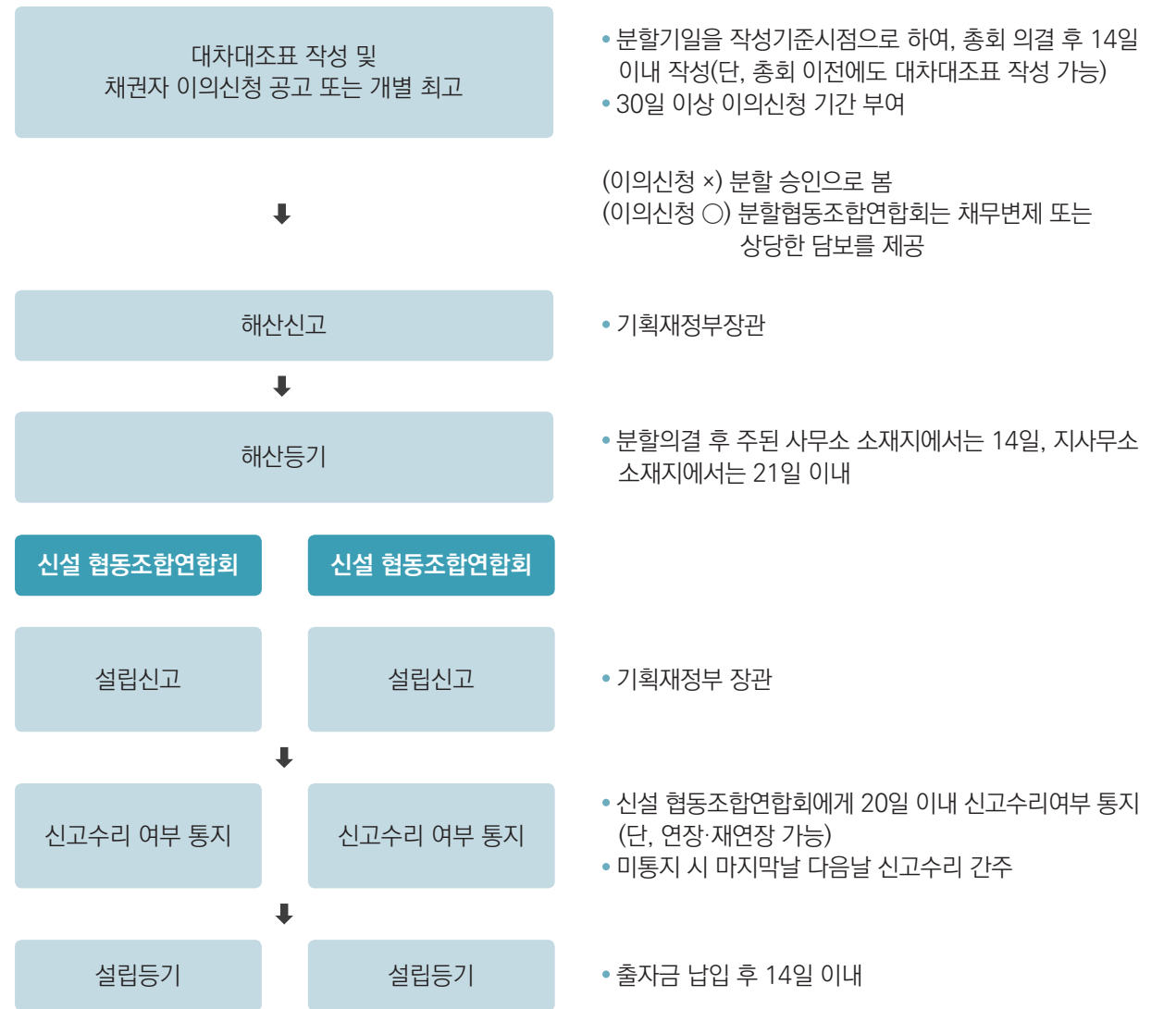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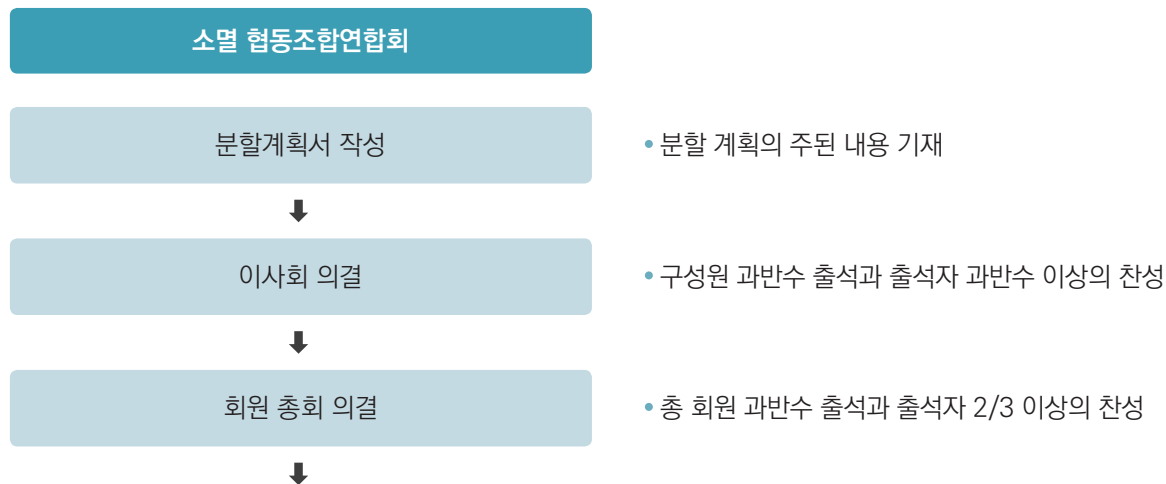
- “분할”이란 한 개의 협동조합연합회가 둘 이상의 연합회로 분리되는 절차
 - “소멸분할”이란 기존의 연합회가 소멸하면서 2개 이상의 협동조합연합회를 신설해 기존 연합회를 승계하는 것($A=B+C$)
 - “존속분할”이란 기존의 연합회가 영업의 일부를 출자해 1개 이상의 연합회를 신설해 기존 연합회를 승계하고, 기존 연합회는 나머지 영업을 가지고 존속하는 것($A=A'+$)
- 분할 후 신설·존속되는 연합회가 분할 전 연합회의 권리·의무(공법상 권리의무, 조합원의 수용, 소송절차 수계 등 포함)를 포괄승계(법 제56조 제3항)

분할 관련 유의사항

- 분할로 인한 신설 협동조합연합회는 분할되는 연합회의 권리·의무를 별도의 절차 없이 승계(법 제56조 제3항)함(단, 승계되는 권리·의무의 범위는 분할계획서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바에 따름)
- 상법상 주식회사 등의 분할과 달리, 협동조합연합회의 분할은 회원 및 해당 회원의 출자금, 연합회 재산과 영업 등이 함께 분할되는 것이 원칙임
 - 회원 및 회원의 출자금 분할 없이 연합회의 재산과 영업 등만이 분할되는 형태의 물적분할은 할 수 없음
- 협동조합연합회의 분할로 신설·존속되는 연합회 역시 협동조합연합회여야 함(즉, 분할의 결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신설·존속될 수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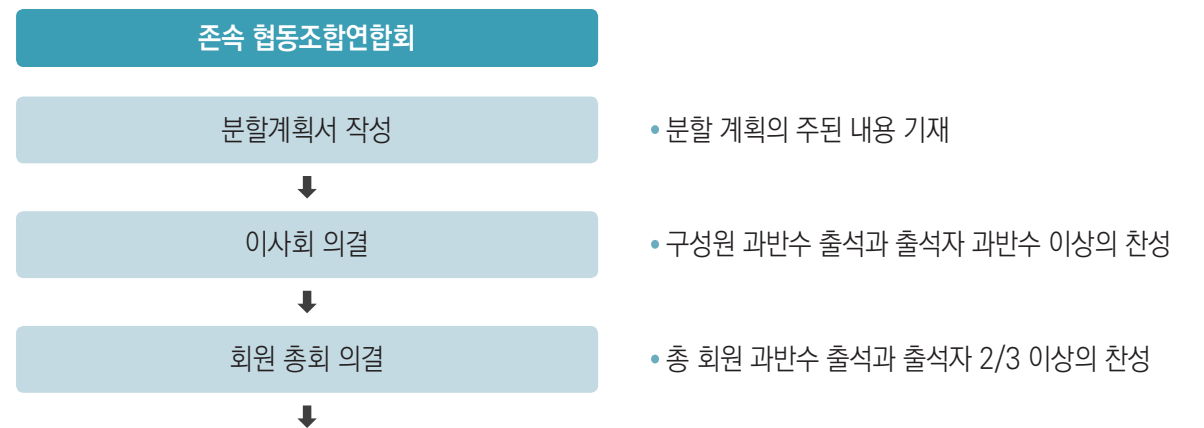
소멸분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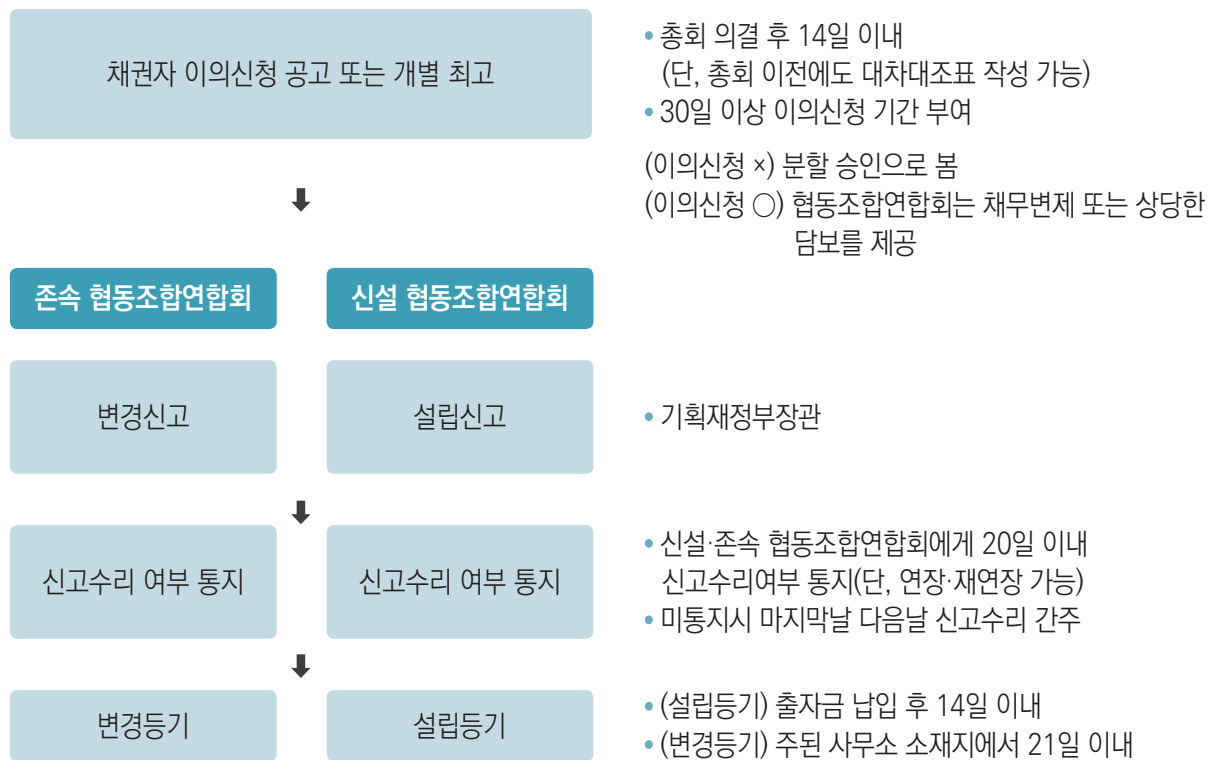
- 소멸분할 절차



존속분할

- 존속분할 절차





분할 세부절차

① 분할 계획서 작성(법 제56조 제1항)

- 분할 계획의 주된 내용 기재

② 이사회 의결(제33조 제2호)

- 작성된 분할계획서에 대한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함
- 조합원 총회의 소집 및 총회 의안(분할승인) 상정을 위한 이사회 의결

③ 회원 총회(법 제29조 제1항 제7호 및 제2항)

- 회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총회소집 통지
- 총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④ 대차대조표 작성 및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법 제14조 제1항, 상법 제232조)

- 총회 의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 작성(단, 총회 이전에도 작성 가능)
- 대차대조표는 분할기일을 기준으로 작성(즉, 총회 전/후로 작성하였더라도, 분할기일까지의 변동사항 추가 반영 필요)

- 연합회는 각 총회 의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가 일정기간(30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함)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i) 공고하거나 ii)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
- 이의신청이 있으면 연합회는 채무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단, 이의신청이 없으면 분할을 승인한 것으로 봄)

⑤ 신고(법 제56조제2항, 제4항)

- 기획재정부장관에 신고

연합회 유형	신고의 종류
존속하는 협동조합연합회	변경신고
소멸하는 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
신설되는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

⑥ 신고수리 여부 통지(법 제56조 4항, 제15조 제2항, 제15조의2)

- 기획재정부장관은 20일 이내에 신설, 존속 협동조합연합회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

* 신고확인증(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활용) 발급

⑦ 변경등기(법 제64조), 해산등기(법 제66조), 설립등기(법 제61조)

- (존속하는 협동조합연합회) 변경(분할의결) 후 21일 이내 변경등기(제64조)
- (소멸하는 협동조합연합회)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 지사무소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 해산등기
- (신설되는 협동조합연합회) 출자금 납입 후 주사무소 소재지에 14일 이내 설립등기

연합회 유형	등기의 종류	등기기한
존속하는 협동조합연합회	변경등기	21일 이내
소멸하는 협동조합연합회	해산등기	주사무소 소재지 14일, 지사무소 소재지 21일 이내
신설되는 협동조합연합회	설립등기	출자금 납입 후 14일 이내

⑧ 사업자등록

연합회 유형	사업자등록 첨부서류
존속하는 협동조합연합회	사업자등록정정
소멸하는 협동조합연합회	폐업신고
신설되는 협동조합연합회	사업자등록신청

다 해산 및 청산

해산 관련 법령

법 제57조(해산) ① 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분할 또는 파산

②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58조(청산인) ① 협동조합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법 제59조(잔여재산의 처리) ①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법 제60조(「민법」 등의 준용) 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법 제66조(해산등기) ① 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 ③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 제67조(청산인등기) ①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이사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 제68조(청산종결등기) ①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 제70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규칙 제11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 ① 법 제57조제2항(법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산신고서에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이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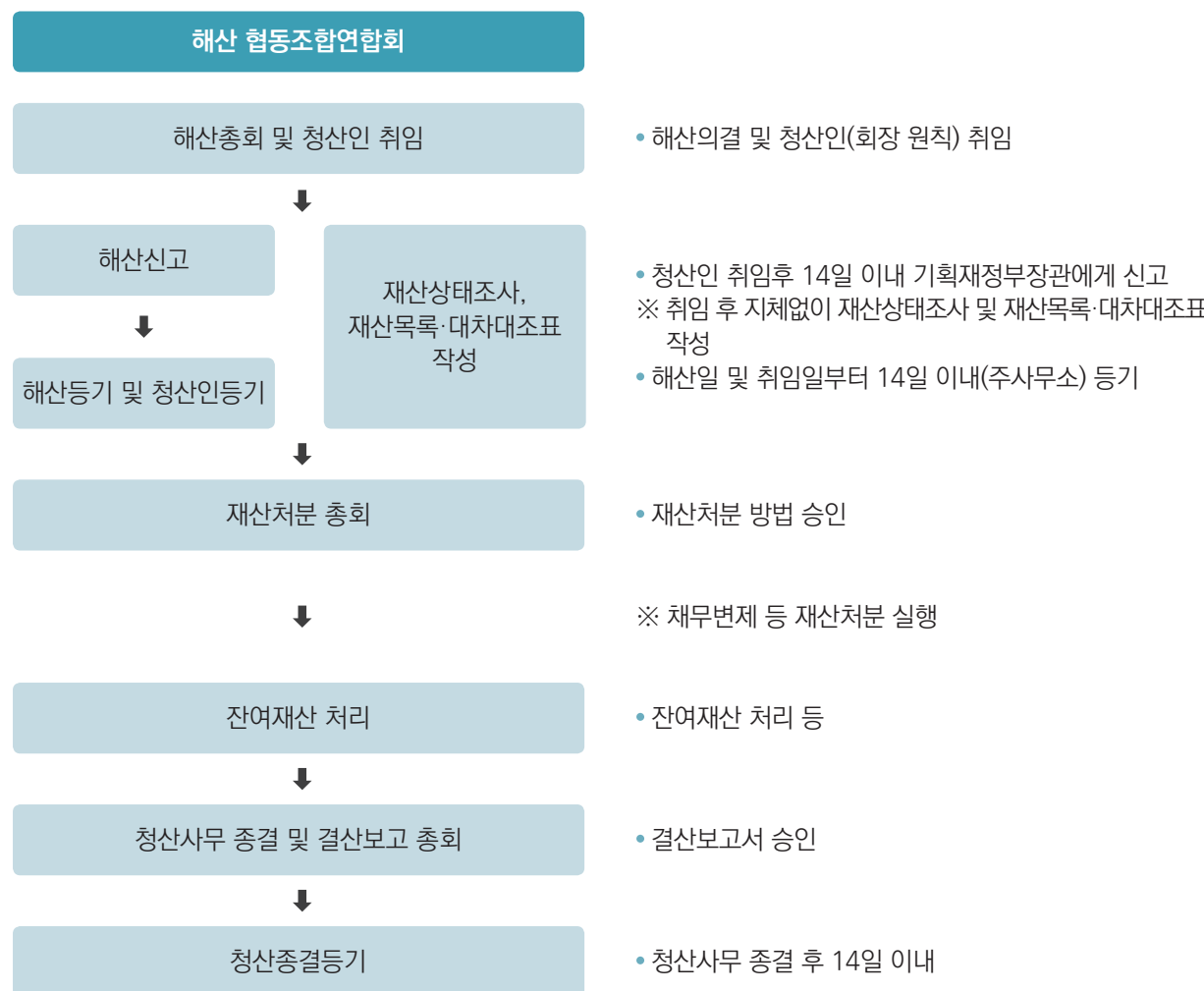
해산 및 청산

- “해산”이란 존속할 이유를 잃은 연합회가 본래의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즉, 해산의결 이후에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나 청산이 종결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
- “청산”이란 합병·분할 또는 파산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연합회가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연합회의 법인격을 완전히 없애는 절차

해산 사유(법 제57조 제1항)

-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 총회의 의결(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합병·분할 또는 파산

해산 절차



① 해산에 관한 총회의결 및 청산인 취임(법 제58조)

- 총회에서 해산이 의결되면 회장이 청산인이 됨(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것도 가능)
-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없이 재산상태 조사 및 재산목록·대차대조표 작성 등 청산사무 개시

② 해산신고(법 제57조 제2항, 시행규칙 제11조)

- 청산인 취임 후 14일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산신고

※ 해산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작성 및 다음 서류 첨부

구분	제출서류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해산 당시의 정관 사본
4	해산총회 의사록 사본 또는 정관상 해산사유의 발생 증명 서류

- 기획재정부는 해산신고서를 받은 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확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미등기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제외)

→ 협동조합이 해산등기를 한 후 행정정보공동이용 업무포털(www.share.go.kr) ‘e하나로민원’에서 확인

※ ‘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 사무에 대한 권한을 득한 후 이용 가능

③ 해산등기 및 청산인등기(법 제66조, 제67조)

- (해산등기) 청산인은 해산일로부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등기
- (청산인등기) 청산인은 취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

※ 상법등기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위 2가지 등기를 동시에 진행

④ 재산처분 방법에 관한 총회 승인(법 제58조 제2항)

- 청산인이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작성을 마치면,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음(총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출석회원 2/3 이상이 찬성하면 총회 승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

⑤ 잔여재산 처리(법 제59조 제1항)

- 연합회가 해산할 경우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⑥ 청산사무 종결 및 결산보고서 총회 승인(법 제58조 제3항)

- 청산사무가 종결되면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음(총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출석회원 2/3 이상이 찬성하면 총회 승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

⑦ 청산종결등기(법 제68조)

-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청산종결등기
- 신청서에는 청산사무 종결 관련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참고 | 해산과 청산 관련 준용사항

•(민법 등의 준용) 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관련 조항 준용

「민법」을 준용하는 주요사항	
제79조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한 경우 이사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
제81조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의무가 있고 의무 부담
제87조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 가능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제88조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2월 이상 ② 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함
제89조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함
제90조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하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함
제91조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가능 ②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인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
제92조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청구 가능
제93조	①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 ②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임무 종료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는 주요사항	
제12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산인으로 선임 불가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5. 파산선고를 받은 자

08 등기

가 설립등기

법 제61조(설립등기) 준용
제61조(설립등기) ①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신고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한다.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신고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회장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등기소)에 설립등기
- 설립등기신청서 기재사항

구분	기재사항	비고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 소재지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신고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회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	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회장은 이사로도 등기하여야 함)

- 설립등기신청서와 첨부서류(간인 날인 필요)

구분	신청서와 첨부서류	비고
1	설립등기신청서	1.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신고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등 기재

구분	신청서와 첨부서류	비고
2	정관	원본 지참 시 사본제출 가능
3	창립총회의사록	공증 받은 원본 제출
4	설립신고확인증	법 제61조 설립신고서 대신 확인증 제출
5	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임원 전원 제출, 법인이 임원인 경우 법인의 취임승낙서와 직무수행자의 선임 증명서·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제출
6	대표자의 인감신고서	
7	출자금 총액 납입증명서	금융기관이 작성한 잔고증명서 또는 출자금납입확인서 등 모두 가능 현물출자시 현물출자재산인계서 또는 출자재산영수증
8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9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합병이나 분할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등기 신청서류

구분	신청서류
1	설립등기신청서와 첨부서류
2	기본법 제53조(출자금소의 의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기본법 제54조(출자금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익)에 따라 이익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나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법 제62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준용

제62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협동조합이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8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 연합회가 지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8일 이내에 등기
 - 지사무소 등기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통합등기 가능

• 지사무소 설치에 따른 등기 신청서류

구분	신청서류	비고
1	등기신청서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설치 연월일 기재
2	이사회회의사록	공증 받은 의사록 제출필요 의사록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 기재
3	등기신청수수료	
4	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	주사무소와 지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의 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 첨부
5	위임장	대표가 아닌 자가 신청하는 경우

다 이전등기

법 제63조(이전등기) 준용

제63조(이전등기) ① 협동조합이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전소재지와 현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 연합회가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회장이 전 소재지와 현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이전등기
 - 구 사무소 소재지 등기소에 신청 가능
- 사무소 이전에 따른 변경등기 신청서류

구분	신청서류	비고
1	변경등기신청서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에 비치
2	정관	정관 사본에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원본과 동일함을 인증하여 제출
3	이사회회의사록	공증 받은 원본을 제출
4	회원총회의사록, 변경신고확인증	정관에 주사무소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주사무소를 변경하는 경우
5	등기신청수수료	
6	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	신소재지 시군구에 대한 확인서와 구소재지의 시군구에 대한 확인서를 각각 제출
7	위임장	대표가 아닌 자가 신청하는 경우

라 변경등기

법 제64조(변경등기) 준용

- 제64조(변경등기)** ① 협동조합은 제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② 제61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 ④ 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⑤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등기 대상에 따른 등기내용

변경등기대상	등기기한	신청인	비고
정관의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일로부터 21일 이내	회장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첨부
출자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	〃	〃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회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	변경일로부터 21일 이내	〃	〃

•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 첨부 서류

구분	첨부서류	비고
1	정관	원본 제출 또는 원본 지참하여 사본 제출
2	총회 의사록	공증 받은 원본 제출
3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4	위임장	회장 아닌 대리인 신청 시
5	- 채권자에게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6	- 사임: 사임서, 사임한 임원의 인감증명서 - 취임: 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임원 변경 시
7	회장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신고서, 인감대지	회장 변경 시
8	- 출자금 및 출자좌수 변동내역 확인서(및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현물출자재산인계서 등) - 출자감소에 따른 변경시에는 출자감소 의결에 따른 채권자 보호절차를 경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출자좌수, 출자금 총액 변경 시

마 합병등기

법 제65조(합병등기) 준용

- 제65조(합병등기)** ① 협동조합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신고를 수리한 날(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협동조합연합회가 합병한 경우 합병신고를 한 날(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14일 이내에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
- 합병 주체별 협동조합연합회의 등기사항

구분	등기사항	비고
1	합병 후 존속하는 연합회 → 변경등기	
2	합병으로 소멸되는연합회 → 해산등기	합병으로 소멸되는 연합회의 회장이 신청인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3	합병으로 설립되는 연합회 → 설립등기	

바 해산등기

법 제66조(해산등기) 준용

- 제66조(해산등기)** ① 협동조합이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 ③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협동조합연합회가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등기
- 청산인이 신청인이 되며,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사 청산인등기 및 청산종결등기

청산인등기

법 제67조(청산인등기) 준용

제67조(청산인등기) ①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이사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청산인은 취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법인인감을 등기
- 첨부서류
 - 청산인이 해산을 결의한 내용의 회원총회의사록(공증필요)
 -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위 회원총회에서 선임된 경우 그 의사록이나 정관에 청산인으로 지정된 자가 있는 경우 그 정관)를 첨부하여 신청

구분	첨부서류	비고
1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2	취임승낙서	
3	인감증명서	
4	인감신고서	
5	인감대지	

청산종결등기

법 제68조(청산종결등기) 준용

제68조(청산종결등기) ①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청산종결등기

- 신청서에 청산사무 종결 관련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구분	첨부서류	비고
1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2	회원 총회 공고문	
3	청산결산보고서를 승인한 총회의사록	공증받은 원본 제출
4	청산결산보고서	출자금분배확인서, 출자금분배 내역서 첨부
5	채권자보호절차를 경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기의 기산일

- 등기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 계산(법 제109조)

참고 1 | 등기 관련 준용사항

- 협동조합연합회의 등기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 준용

협동조합연합회 등기 관련 준용사항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는 주요사항	
제62조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도 등기
제65조	법인의 해산등기 신청서에는 해산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이사가 청산인을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제12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산인으로 선임 불가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5. 파산선고를 받은 자
「상업등기법」을 준용하는 주요사항	
제24조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제24조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에 관한 등기신청의 경우 증명서면 첨부
제25조	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



참고 2 | 등기 관련 내용정리

구분	관련조항	관할 등기소	등기기한	신청인
설립	제61조	주사무소 소재지	출자 납입 완료 후 14일	회장
지사사무소 설치	제62조	주사무소, 지사무소	주사무소 21일 지사사무소 28일	회장
이전	제63조	전 · 현소재지	전 · 현 소재지 각각 21일	회장
변경	제64조①	각 사무소 소재지	각각 21일	회장
출자금 변경	제64조②	각 사무소 소재지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회장
합병	제65조	각 사무소의 소재지	합병신고를 수리(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날부터 14일	회장
해산	제66조	주사무소, 지사무소	주사무소 14일 지사사무소 21일	청산인
청산인	제67조	주사무소	취임일부터 14일	청산인
청산종결	제68조	주사무소, 지사무소	주사무소 14일 지사사무소 21일	청산인